

의안번호	제215호
보 고 년 월 일	2012. 4. 6 (제 10 회)

보 고 사 항

2012년 스마트 전자정부 시행계획

제 출 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간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2. 3. 23

1. 보고 주문

- 『2012년 스마트 전자정부 시행계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 이유

- 스마트폰 등 급속한 IT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인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2011~2015)」 수립('11.1월)
-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아젠다, 17개 세부과제 추진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은 '1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0년에 이어 2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원동력으로 작용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의 성공적 이행 및 3회 연속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2012년 스마트 전자정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추진 성과

-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구현
 - 2012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10년에 이어 2회 연속 세계 1위
 - 정보화마을, 민원24의 「2011 UN 공공행정상」 수상
 - 모바일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서도 전세계를 선도

※ OECD m-Government 보고서('11.11월)에 제시된 43개국 150건의 모바일 전자정부 사례 중 우리나라가 22건(14.7%)으로 가장 많이 인용

▶ 전자정부 발전지수 : ('08년) 6위 → ('10년) 1위 → ('12년) 1위

▶ 온 라인 참 여 지 수 : ('08년) 2위 → ('10년) 1위 → ('12년) 1위
-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 등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 정보접근센터 4개, IT봉사단 612명, 외국 전문가 초청연수 233명 등

▶ ('08년) 2,732만불 → ('10년) 14,876만불 → ('11년) 23,566만불

○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정비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11.3월)으로 공공·민간 준영역의 체계 확립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확대('08년 64% → '11년 84%)

▶ 국가정보보호순위(WEF) : ('08년) 51위 → ('11년) 12위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4,186대), 사랑의 그린PC(20,470대), 통신중계서비스(50만건), 취약계층 정보화교육(21만명) 등

▶ 취약계층 정보화지수 : ('08년) 68.0 → ('11년) 72.2

4. 주요 내용

(1)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모바일 전자정부 중장기 계획에 따라 197종 신규 개발

- * 업무포털·지식관리서비스 등 내부행정 34종, 옥외광고물조사·식품위생업 지도·점검 등 현장행정 30종, 국가자격정보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133종

○ 「생활민원 불편신고서비스」 등 '11년 시범서비스의 전국 확대 추진

- *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안전 도우미, 재난정보 안내, 공공기관 안내 등

○ 각 기관 서비스 검증, 등록, 배포 등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운영

- * 서비스 개발·테스트 효율화 위해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및 테스트베드 구축

○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창출 지원 강화

- * 환경, 관광 등 공공정보 개방 확대('11년 13종 → '12년 33종 → '15년 100종)

(2)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 등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 * 원터치SOS('11년 서울·경기남부·강원 초등학생 → '12년 전국 초등학생), 112앱(서울·경기·강원 미성년자 → 전국 미성년자), u-안심('11.9월 전국민 기 실시)
- 아동정보 사전등록 등 「실종아동찾기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 연계기관(정보) : '11년 9개기관(38만건) → '12년 16개기관(64만건)
-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확대
 - *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확대 : '11년 61개 지자체 → '12년 88개 지자체
 - * 수배차량 자동인식, 특정 행동패턴 감지 등 지능형 센터 시범운영(2개소)
- 축산농장 공간DB·방문자정보 구축 등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

(3)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정부중앙청사와 세종시 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2개소) 설치
 - * 국회 의원회관 內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병행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을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
 - * (중앙부처) 31개 → 35개 / (지자체) 시도(서울·인천·경기) → 시군구 확대
- 법·제도, 성과체계 정비를 통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 「스마트워크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업무평가에 이용실적 반영 등
- 세종시 이전에 대비, 디지털 융합행정체계 구축 등 행정 효율화
 - * 국무영상회의 및 부처공용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시범운영 등

(4) 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모바일 국가대표포털(m.korea.go.kr, 앱) 서비스 고도화
 - * 국민의견 제안·수렴 등 모바일 기반 양방향 소통 서비스 제공
- 국민·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통합 가속화
 - *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 국가자격증 온라인 발급,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시행 등

- 「IT 대시보드」 등 정부 정책·예산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
 - *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의 관련 정보(예산, 사업내용, 추진단계, 추진성과 등)를 공개함으로써 정보화 사업의 투명성 확보
- 「빅데이터 활용 전략 계획」 수립 및 모델 검증 추진
 - * (재난안전) 서울지역 침수 전조감지, (사회복지) 긴급복지 수요 발굴

(5)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 * 웹표준 준수 의무화,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등
- 범정부 EA,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클라우드 사무환경 구축계획 수립 등
-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 DDos 대응시스템 소속기관 확대(320개), 중소기업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10개 업종 150회) 등
- 정보화사업 발주제도 개선 등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선진화
 - * 하도급 직불제 및 하한제, 기술평가 강화, PMO 제도 도입 등
- 전자정부 국제협력 강화 통해 전자정부 수출 3억불 달성 추진
 - * MOU 추진 확대(12국→17국), 10대 브랜드 육성,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창설 등

5. 소요 예산 : 총 2,965억원

-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557억원
-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1,004억원
- 일과 삶이 조화된 스마트워크 활성화 : 337억원
- 소통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423억원
-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644억원

[별지]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2012년 스마트 전자정부 시행계획(안)

2012. 3.



행정안전부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스마트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2
III. 추진현황 및 2012년 중점 추진과제	3
1.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3
2.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12
3.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19
4. 소통 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26
5.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33
VI. 과제별 주관기관	45
V. 과제별 소요예산	46

[참고]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2011 ~ 2015) 요약

I

추진배경

-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 대응, 더 나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필요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급속 보급으로 촉발된 모바일 환경은 타 기술과의 융합으로 더욱 지능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 스마트폰 사용자는 '11.3월 1천만명, '11.11월 2천만명, '12.1월 2,376만명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1.1월,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2011~2015)”을 수립·발표
 -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아젠다, 17개 세부과제 마련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은 '1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0년에 이어 2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원동력으로 작용
 -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 발휘 필요
 - ※ '10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자정부발전지수 1위, 온라인참여지수 1위

⇒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2011~2015)의 성공적 이행 및 3회 연속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2012년 스마트 전자정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5대 아젠다, 17개 세부과제별로 그간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2012년 중점 과제를 선정·추진

II

스마트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개념 >

- ◆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

Ⅲ

분야별 추진현황 및 2012년 중점 추진과제

1.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추진 필요성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기존 PC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필요
- 모바일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보안성 확보, 부처별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한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 필요
- 모바일환경 확산, 수요자의 프로슈머(Prosumer)화 등으로 공공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요구 증대

※ 공공정보의 민간기관 제공률은 14.8%, 공개서비스는 13종으로 제한적('10년)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PC기반 서비스	모바일 완결 서비스
단방향 · 획일적 방식	양방향 · 다채널 방식
반응 행정 · 보편적 서비스	선제 행정 · 맞춤형 서비스
제한된 공공정보 · 서비스 공개	전면적 공공정보 · 서비스 공개

□ 추진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1)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2) 모바일 기반 혁신적 전자정부서비스 발굴 및 제공
	3)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구현
②범부처 모바일 공통 기반·인프라 확충	1)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2)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보안 체계 및 법제도 정비
	3) 범부처 모바일 서비스 센터(MSC) 구축
③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1)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3)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오류 측정 및 개선 지원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 추진 현황

-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에서 총 720여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

- (모바일 앱) 민원24, 상상제안 등 총 393개의 서비스 제공 중

구 분	서비스 내역
민원서비스	민원24,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상상제안 등 6개
뉴스정보	공감 카툰, 숫자로 보는 중소기업 동향 등 29개
생활정보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연말정산 2011, 예방접종 도우미 등 261개
전문지식정보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특허고객상담사례집 등 35개
엔터테인먼트	u-남도여행길잡이, 국립공원 산행정보 등 62개

- (모바일 웹)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총 327개의 서비스 제공 중

구 분	서비스 내역
중앙행정기관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90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강원도 등 79개
입 · 사법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6개
교육기관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등 7개
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24개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H공사 등 121개

- 모바일 정부(m-Government)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

* OECD m-Government 보고서('11.11월)에 제시된 43개국 150건의 모바일 전자정부 사례 중 우리나라가 22건(14.7%)으로 가장 많이 인용

□ 2012년 추진과제

- (현장행정) 옥외광고물 조사 등 현장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추진(30개)

번호	분야	서비스명	번호	분야	서비스명
1	재산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16	지역 산업	옥외광고물 현장조사
2		공유재산 현장조사	17		석유판매업 현장조사
3	환경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18		담배소매업 현장조사
4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19		고압가스업 현장조사
5		폐기물배출자 지도점검	20	농촌	농지전용신고 현장조사
6		비산먼지발생사업 지도점검	2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현장조사
7	위생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2	보건	약업소(약국) 지도점검
8		공중위생 지도점검	23		의료기기판매업 지도점검
9		식품위생업 지도점검	24		의료기관 지도점검
10		식품영업신고 현장조사	25		의료업소(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지도점검
11	문화 체육	식품수거등록관리	26	산림	산지전용신고 현장조사
12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27	축산	동물병원 지도점검
13		게임산업신고 지도점검	28		가축사육업 지도점검
14		체육시설업신고 지도점검	29		축산물 판매업 지도점검
15	수산	어장현장조사	30		동물판매업 지도점검

- (내부행정) 각 부처 업무포털, 지식관리시스템 등 내부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추진(34개)

번호	기관명	서비스명	번호	기관명	서비스명
1	국토부	국토부 업무포털	18	문화재청	지식관리시스템
2	기재부	기재부 업무포털	19	기상청	사이버교육시스템
3	선관위	선관위 업무포털	20	구미시	실시간 체납조회 시스템
4	해경청	해양경찰 업무포털	21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
5	서울교육청	교직원 교육수첩	22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6	행안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23	복지부	인정조사
7	행안부	사이버학사관리시스템	24	지경부	업종별 해외진출 통계
8	관세청	지식관리시스템	25	교과부	행정업무서비스
9	농림부	지식관리시스템	26	총리실	M프라임넷
10	부산시	지식관리시스템	27	방통위	전파감시시스템 원격관리
11	노동부	다우리 모바일	28	방통위	업무포털
12	인권위	모바일 행정	29	산림청	업무포털
13	농림부	수산물 품질 검역검사	30	지경부	지식관리시스템
14	농림부	농장방문차량 정보수집	31	지경부	업무포털
15	농진청	업무포털	32	지경부	통합무역정보
16	외교부	다부처 협상지원	33	지경부	우정사무 업무포털
17	경남	도서관리시스템	34	부산시	도서관리시스템

○ (대국민) '11년 시범서비스의 전국 확대 및 '스마트 제보', '부동산 감정' 등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신규 구축 추진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등 '11년 시범서비스의 전국 확대 추진

*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안전 도우미, 재난정보 안내, 공공기관 안내 등

- 권익위,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7개 신규 구축

구분	기관	서비스	구분	기관	서비스
1	권익위	스마트 제보	10	한국감정원	부동산 감정정보 서비스
2	행안부	새 주소안내시스템	11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종합 안내 서비스
3	노동부	국가고시/자격증 알림터	12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안내 서비스
4	문화부	모바일 문화콘텐츠 통합안내	13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종합 안내 서비스
5	대법원	모바일 법원경매정보	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안내 모바일 서비스
6	복지부	모바일 건강길라잡이	15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신청 안내
7	국립박물관	이류지엄 모바일 서비스	16	국립수산물과학원	해파리신고 서비스
8	대법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17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생물종합정보
9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정보 모바일 서비스			

- 서울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16개 구축

구분	기관	서비스	구분	기관	서비스
1	서울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	16	인천	본청 모바일 관광콘텐츠 강화
2		광진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7		옹진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3		강남구 QR코드 발급시스템	18		부평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4		강동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9		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5		은평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0		본청 2013 전국체육대회
6		본청 모바일 민원시스템 구축	21		서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		종랑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2		본청 종합문화예술회관 예매발권
8		본청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23		동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9		관악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4		본청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0		마포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5	광주	남구 모바일 도서관 구축
11	부산	금정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6		본청 상수도 모바일 홈페이지
12		사상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7		본청 스마트 119 긴급구조
13		서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8		북구 장비 확충
14	대구	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9	대전	본청 모바일 인터넷 방송
15		수성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30		유성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구분	기관		서비스	구분	기관		서비스
31	울산	남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4	전북	무주군	전통산업 홈페이지 구축
32		동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5		부안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33		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6		전주시	모바일 행정정보 공개
34		북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7		정읍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35		중구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	78	전남	구례군	마을단위 정보인프라 구축
36	경기	본청	모바일 포털서비스 고도화	79		해남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37		고양시	고양 문화관광 웹모바일	80		신안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38		과천시	과천알리미 앱개발	81		곡성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39		하남시	도서관전산시스템 관리	82		광양시	정보화마을 모바일 홈페이지
40		남양주시	모바일 서비스용 솔루션	83		순천시	첨단교통관리(ATMS) 구축
41		군포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84		장흥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42		본청	모바일 서비스 운영	85		화순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43		포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86	경북	본청	투자유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44		양평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87		본청	도의회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45		이천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88		경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46		군포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89		고령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47		동두천시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90		문경시	사이버투어 콘텐츠 개발
48		광명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91		예천군	문화관광안내 앱 개발
49		수원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92		영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50		오산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93		울진군	관광정보서비스 확대 구축
51		수원시	IT융합 행정서비스	94		청도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52		성남시	스피드 민원 접수처리	95		울릉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53		부천시	대형폐기물처리시스템	96	경남	거창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54	강원	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97		김해시	온라인 생중계시스템 도입
55		동해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98		김해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56		본청	스마트강원 서비스구축	99		남해군	무선인터넷 존 구축
57		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00		본청	공공 Wi-Fi망 구축
58		원주시	모바일 게이트웨이	101		본청	모바일 공개협업 도청 구축
59		정선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02		양산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60		태백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103		양산시	U-도서관 서비스 구축
61	충북	홍천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04		진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62		제천시	모바일 관광홈페이지 구축	105		창녕군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
63		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06		창원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64		영동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07		창원시	Hybrid 통합앱 고도화
65		본청	지역 SW산업 진흥 지원	108		통영시	스마트 시티
66		청주시	U-청주 스마트 로드 구축	109		통영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67	충남	본청	120 민월콜센터 구축	110		하동군	무선인터넷존 구축
68		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11		함안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69		본청	도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	112		함안군	시스템 보안대책 강화
70		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13		함안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1		서산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14		합천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2	전북	남원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15	제주	제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73		무주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16		서귀포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② 범부처 모바일 공통 기반·인프라 확충

□ 추진 현황

- 행정기관 간의 업무연계 등을 위하여 통합전산센터(2개), 정부청사(3개)와 16개 시·도를 연결하는 국가백본망(K-Net) 운영 중
 - 복지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515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국가백본망(K-Net)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무료(백본망구간) 이용

< 국가백본망(K-Net) 이용기관 현황 >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합 계
	행정기관	소속기관	계	광역 시도	시군구	계	
①내부행정망	12	192개	205개	—	—	—	205개
②인터넷망	—	10개	10개	—	—	—	10개
①+② 공동사용	39개	16개	55개	16개	229개	245개	300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등 체계적인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 5종* 마련('11.9)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MDM 등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11.12)

* Mobile Device Management : 단말 등록, 원격 정보삭제 등 보안기능 수행

□ 2012년 추진과제

-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국가백본망(K-Net) 개선
 - 국가정보통신망을 유선서비스 중심에서 유·무선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대역 통합망(BcN) 기반으로 전환

- 행정기관이 모바일 등 신규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이용제도 개선
 - 정보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개별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국가백본망(K-Net)에 통합
- 대국민 및 내부행정 모바일 서비스 보안대책 마련
- (대국민) 단말기와 시스템 간 전송 정보를 암호화, 키보드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가상키보드 도입 등
 - (내부행정) 단말 분실시 GPKI 인증서·행정서비스용 앱 등을 원격에서 삭제하여 단말 內 정보유출 방지
- 각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검증, 등록, 배포 등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운영
- 모바일 서비스 개발 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 서버·통신장비·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84대, 30여종의 소프트웨어 설치
 - 모바일 서비스 등록·관리 등 행정용 앱스토어 운영
 -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침 및 가이드라인 안내
-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및 테스트베드 구축
- 각 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 시, 로그인·게시판 등 공통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 각 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 후, 정상 동작 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

③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추진 현황

- 국가가 보유한 정보자원에 대한 민간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11.6)
 - 공개 가능한 정보목록(351종) 제공, 정보이용에 대한 신청접수, 정보보유기관과의 중계기능, 저작권 관련 상담 등 통합 지원
- 공공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 국가공유자원포털(data.go.kr) 서비스 개시('11.7)
 - 프로그램(Open API 등), 데이터 등 9,500여종의 정보자원 제공
 - * 교통정보, 식품안전정보, 보육정보, 기상정보 등 13종 126개 Open API 제공
- 공공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및 발의('11.9)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정('11.7),

□ 2012년 추진과제

①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활용 수요가 높은 공공정보에 대한 Open API 서비스 확대
 - 환경, 관광정보 등을 Open API 공유서비스로 개발·제공
 - 기관별로 개발·제공중인 Open API의 통합 연계서비스 추진
 - * '11년 13종 → '12년 20종 개발(기 개발된 13종 연계) → '16년 100종

○ 국가공유자원포털(data.go.kr) 고도화

- 시맨틱(Semantic)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정보 지능형 연계체계 구축, 공공정보 활용사례 공유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 추가 등

○ 국가 중요지식정보자원 지속 발굴 및 지정·운영

- 중요 지식정보를 발굴·지정하여 DB化 및 상호연계 추진
- * 국가 중요지식정보자원 지정 ('08년 47종, '12년 30종 예정)

○ 「2단계 국가DB구축 추진계획('11~'15)」에 따라 연차별 DB구축

- 대국민 수요가 많아 활용도가 높은 DB구축사업 우선추진

○ 공공정보 현황지도 제작 및 개방 확대 유도

- 분야별·기관별 공공정보 보유·개방·활용 현황 분포도 작성

② **공공정보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 공공정보 오픈 라이선스 체계 정립

- 오픈 라이선스 적용 방안 마련, 시범적용 추진 등

○ 공공정보 품질관리지원센터 운영

- 중요지식정보자원 등에 대한 품질진단 및 품질 개선사업 추진
- 품질수준 자가진단 및 수요자 맞춤 단일창구(포털) 운영
- 공공부문에 적합한 DB특성별 품질관리 모델 개발·확산

2.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추진 필요성

- 재난재해, 생활안전사고, 식품사고, 가축전염병 및 흉악범죄 확산 등으로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협**

※ 생활안전사고 : 272천건('07) → 292천건('09)

※ 5대 강력범죄 : 522천건('07) → 590천건('09)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스템, 예산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복수급 등 복지전달체계 비효율 발생에 따른 대응 필요

※ 정부 복지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 : '09년 26%(74.6조) → '10년 28%(81조)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신속대응/사후조치 위주 안전관리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부처별 안전 행정	범부처 통합된 안전서비스
공급자 위주 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 추진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 실시간 지능형 공공 안전망 서비스 제공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 선제적·예방적 국가 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 3) 국가영상정보자원(CCTV)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②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1) 식품,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체계 확립 2) 사람, 가축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 마련
③ 수요자 중심의 국가 복지시스템 선진화	1)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2) 나눔활동, 복지바우처 등 개별 복지시스템 선진화 3) 다문화가정 종합지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

① 실시간 지능형 공공안전망 서비스 제공

□ 추진 현황

- 어린이 등이 긴급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신고, 구조요청과 위치확인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범 개시('11.8월)
 - 약 50만명 가입, 총 13건의 성과 창출(범인검거 8, 구조 5)
 - * 휴대폰용 원터치SOS, 스마트폰용 112앱, 전용단말기용 u-안심서비스로 구성
-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2월)
 - 승강기 고유번호판 부착 및 승강기 안전정보(DB) 공개
- 실종신고 증가추세에 따라 '11년부터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11.12월)
 -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아동정보 사전등록(송파, 강동)
 - 무연고 아동정보와 실종 신고된 정보를 연계(8개 기관, 38만건)
- CCTV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CCTV 효율적 운용 방안 수립('10.6.9)
 - '11년 서울 중구 등 34개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 초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체계 구축
 - 기상·기후 분석정보통합시스템 구축('10년 3개, '11년 6개)
 -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서비스 제공('10년 1개, '11년 1개)

□ 2012년 추진과제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전국의 취약계층 가구 초등학교생(희망자)을 대상으로 'U-안심서비스' 제공 확대
 - 단말기(약2만대) 보급 및 향후 2년간('12~'13) 이용료 지원
 - U-안심서비스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여 긴급호출 시 CCTV가 현장을 촬영토록 연계 구축 및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일부 자치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선정, 연계 구축 추진
 - 자치단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보완시 활용토록 가이드라인 배포
 - 생활안전 위해요소·불편사항 신고시스템 확대 운영
 -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해 지역 내 재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 * '09년 최초 구성, '11년 현재 약 9,600명 활동 중
- 실종아동 관련정보 추가 연계 등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 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 아동정보 사전등록 전국 확대 및 실종자 위치추적 체계 구축
- * '11년 2개구청(송파·강동) → '12년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2,190개소
- 복지부·여가부·입양정보원 등 7개 기관 정보 추가 연계
- * 연계기관(정보) : '09년 1개(1.3만건) → '11년 9개(38만건) → '12년 16개(64만건)

② 국가영상정보자원(CCTV)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확대
 - 서울 도봉구 등 총 27개 자치단체에 신규 구축(국비 143억원 지원)
 - * '11년까지 61개 자치단체에 구축, '15년까지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 구축 완료
- 영상정보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시범 운영
 - 지능형 기술 종합검토 후 2개 기존 센터에 시범구축
 - 수배차량 자동인식, 특정 행동패턴 감지 기능 등 구현
 - * '12년 시범사업 결과 종합분석, 우수사례 발굴 → '13년부터 단계적 확산
- 도시공원 등 어린이 대상 범죄취약지역 CCTV 추가 설치
 - * '12년 2,800개소 290억원 투입('09~'11년 총 10,775개소 19,014대 803억원 투자)
- 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법 제정 추진

③ 선제적·예방적 국가 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

-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예·경보시스템 강화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대상 확대(재난실무자→지방자치단체장)
 - 재난방송전문채널 확보 및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확충(종편 채널)
 - 방사능 누출, 대규모 정전 등 민방위 경보 대상 재난 확대
-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체계 확대
 - 종합감시 대상 기상현상(풍랑, 해일 등 3개), 분석대상 기상·기후정보(환경 등 2개), 공동활용서비스(고층 1개)

②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 추진 현황

- 예방 중심 가축 위생관리를 위한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
 - 스마트폰 및 차량용GPS와 연계하여 수의사,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농장 및 축산 관계자 DB 구축
 - 질병발생농장, 역학농장 및 방문자에 대한 이동경로 및 역학관계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가축이동 및 농장방문) 시스템 구축
- 국경검역 관리체계 구축
 - 출·입국 정보 실시간 수신 및 입국신고 대상자 선별 체계 구축
 - * 법무부(출·입국자료, (탑)승객명부, 실시간 입국자자료 등), 관세청(입국예약자료), 외교통상부(여권정보), 공항공사(항공 운항정보) 등과 연계
 - 가축전염병 발생국 입국 축산관계자 소독실시 여부 등 국경검역 조치정보 해당 지자체와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

□ 2012년 추진과제

- 예방 중심 가축 위생관리를 위한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고도화
 - 축산시설 출입차량(자) 농장방문정보 수집시스템 확대 구축
 - 농장입구, 축사, 농장주거주지, 차량 진입지점 등 공간DB 확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축산농장 근로 고용 내·외국인근로자,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국일시이동제한(Standstill) 전파체계 구축

③ 수요자 중심의 국가복지시스템 선진화

□ 추진 현황

-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을 통해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 中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고, 부정 또는 중복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
 - * 복지부, 노동부 등 복지관련 6개 부처, 노동보험시스템, 보훈정보 등 8개 시스템 연계
- 나눔활동(기부·자원봉사) 참여자와 나눔단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나눔포털」(nanumkorea.go.kr) 서비스 개시(12월)
 -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역 및 결산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 나눔단체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
-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4천대), 사랑의 그린PC(1.7만대) 보급 및 정보화교육(17만명) 실시
 - *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 지속 향상('09년 69.7점→ '11년 72.2점)
- '11.4월부터 국내 정보화마을과 해외 정보접근센터를 활용, 결혼 이주여성과 모국의 가족 간 상시 화상상봉 실시
 - * 화상상봉 실적('11.4월~12월) : 22,351건(다문화가정 1,082건, 지역주민 21,269건)

□ 2012년 추진과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 통합조사표 및 복지급여관리 기능개선, 지자체 개별 복지 서비스 확대, 사망의심자 정보 Hub 구축
 - 범정부 복지대상자 자격 및 이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누구나 손쉽게 기부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확충
 - 「온라인 나눔포털」(nanumkorea.go.kr)을 공익법인공시시스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 나눔넷(보건복지부) 등과 연계
 - 기부금 모집·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및 상시공개
- 외국인 대상 민원서비스 확대 및 IT 교육 활성화
 - 전국단위 다문화 IT 방문지도사 양성 확대(50명→100명)
-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정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강화
 - 전국 237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장 및 교육사이트 활용(6,000명)
- 다문화가정 등 지역주민 화상서비스 활성화
 - 국내·외 다문화가정 '사랑의 그린PC' 보급(50대) 및 이용 거점화
 - 지자체(병원, 보건소 등)와 협조, 법률·건강 상담서비스 추진
- 소외계층 어린이와 함께하는 'IT 희망나누기 운동' 추진
 - '방과후 정보문화교육' 봉사활동 전개(7.5천명 대상)

3.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추진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하는 방식 선진화, 일과 삶의 균형 등 선진국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근무형태 대두
- 스마트폰, 원격영상회의 등 IT환경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현 가능
- 스마트워크 활성화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Work Hard’에서 ‘Work Smart’로 전환하고,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 필요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사무실 근무(PC 기반)	위치 무관(스마트워크&모바일오피스)
업무는 현장, 기록은 본부에서	현장에서 실시간 업무처리 및 기록
부처간 제한적 업무 협업	기관간 경계없는 전면적 업무 협업

□ 추진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 IT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확산	1) 스마트워크 센타 도입 및 확산
	2) 원격영상회의 및 통합커뮤니케이션 구축
	3) IT기반 모바일 및 재택근무 활성화
② 조직·인사·복무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1) 공공분야 법제도 기반 조성
	2) 민간분야 확산 기반 마련
③ 지식기반 기관간 디지털 행정협업 (융합) 구축	1) 기관간 행정협업 지원시스템 구축
	2) 분야별 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4) 스마트 IT와 융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선진화

1 IT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확산

□ 추진 현황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추진계획 수립('11.2)

《 스마트워크센터 단계별 구축계획('15년 50개소) 》

- ❖ (11년, 도입기) 10개소 ⇨ 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
- ❖ (12년, 운영기) 2개소 ⇨ 정부중앙청사 및 세종청사에 출장형 센터 구축
- ❖ (13년, 확산기) 8개소 ⇨ 국회(의원회관), 과천청사, 통합 지방자치단체 등
- ❖ (14~15년, 정착기) 30개소 ⇨ 지역거점 등 전국적으로 30개 센터 구축

○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스마트워크센터 추가 구축(8개소)

구 분	주 소(위 치)	좌석규모		비 고
		공무원	민간	
서초센터	서울시 서초구	25	5	'11.9.5
일산센터	고양시 일산구	27	5	'11.10.17
부천센터	부천시 원미구	20	-	'11.10.17
수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20	-	'11.10.24
인천센터	인천시 남구	20	5	'11.10.24
행안부(조직실)	정부중앙청사	3개과	-	'11.12.7
잠실센터	서울시 송파구	20	5	'11.12.12
구로센터	서울시 구로구	18	-	'11.12.12

○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을 통한 저변 확대

- 방통위 등 12개 시범기관 지정, 10월까지 2,700명(연인원5,800) 참여
- 11월부터 신규 26개 기관(행정기관24, 공공기관2) 추가지정 체험근무
- 스마트워크 시범기관의 체험근무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응답자의 84.3%가 센터 근무에 만족, 83.6%는 동료에게 권하겠다고 답변

□ 2012년 추진과제

-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의 최적의 구축모델 개발
 - 출장목적, 형태 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모델(설계) 개발
 - * 가변형 회의실(좌석), 휴식공간의 능동적 배치, 방음, 보안사항 반영 등
- 정부중앙청사와 세종시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2개소) 설치
 - 정부세종청사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는 국무총리실 이전 시기('12.9월 예정)에 맞춰 신규 구축 (200평 규모)
 - 정부중앙청사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는 '11년도에 시범구축한 행안부 조직실에 타 부처용 업무좌석 증설 구축 (6석 규모)
- 국회 의원회관내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국회 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년도에 국회내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추진
- 스마트워크 이용 기관 확대
 - 전 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 미이용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까지 확대
 - 일부 스마트워크센터에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근무좌석 설치
 - * 공공기관 직원 근무좌석이 없는 수원 및 부천센터에 마련 (센터당 5석)

② 조직·인사·복무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 추진 현황

-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제정 추진, 인사제도 개선 등 제도 기반 마련
 - 국회에 김정권 의원(5.3), 조윤선 의원(7.8) 발의 법안 계류 中
 - 스마트워크로 인한 평가 불이익 금지 등 복무규정 개정(6월), 스마트워크 실적 부서장 평가에 반영 등 성과평가지침 개정(9월)
- 스마트워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과목 개설(5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9월)
 - 국제 컨퍼런스 개최(9월), 정책포럼, 각종 세미나, 언론 등 홍보

□ 2012년 추진과제

① 공공분야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회기 내 「스마트워크촉진법」 미제정시 '12년 입법 재추진
- 스마트워크 이용활성화 지침 마련·보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스마트워크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이용 활성화 도모
 - 스마트워크센터 정기근무자 선발을 위한 부처 인력풀 구성·운영
 - 부처별 스마트워크센터 근무가 가능한 직무편람 작성·제공
-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 체험근무 추진
 - 매월 2회 체험버스 코스를 운영,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결제, 보고 등 체험근무 실시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스마트워크 교육과정 개발
 - 교육훈련기관의 각종 과정에 '스마트워크 이해' 시간 공통포함
 - 중공교 사이버 교육과정에 '스마트워크 제도' 개설·운영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적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테마점검 등) 가점제 운영 및 우수기관(직원) 표창 등
 - 소속직원의 스마트워크센터 예약 시 우선순위 부여
- 정부업무평가 시 스마트워크 이용실적 반영
 -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실적반영 추진 및 지표개발
- 스마트워크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기관 또는 개인 포상
- 스마트워크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차세대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표준인사시스템 서비스 확대, 인사시스템 구조 개편 및 기능 확대, 인사정책지원체계 고도화 등

② 민간분야 확산 기반 마련

- 민관 합동 스마트워크 포럼 활성화
 - 포럼 정책간담회(분기1회) 및 추진협의회 정례회의(반기1회) 개최
- 글로벌 스마트워크 선도를 위한 국가간 협력 확대
 - 스마트워크 선진국과 공동으로 '스마트워크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 한국의 스마트워크 정책/우수사례 등을 해외 학술지 등에 기고

③ 지식기반 디지털 융합행정 체계 구축

□ 추진 현황

○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확대

- 공동이용 행정정보 **28종 확대**(92종→120종) 및 이용기관 23개 확대(415개→438개)
- 맞춤형 정보조회서비스(원스크린) **22개 확대**(405개→427개)
- 전자민원서류관리 연계서비스 **5개 확대**(3개→8개)
- 다부처 정보연계를 통한 **정보유통 서비스 확대**
 - ※ 미환급금 조회·신청·환급 서비스 대상 확대(8개)

○ 부처 간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시범 구축 추진

-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부처 간 협업업무에 대하여 전자결재, 메모보고 및 업무협조 요청·처리 기능 제공
 - * 사무실 PC(웹캠, 헤드셋), 메신저 등 소통도구 제공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11.12)

□ 2012년 추진과제

○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편익 증진

- 공동이용 행정정보 **15종 확대**(120종→135종)
 - * 고용보험수급자격(노동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연금공단) 등
- 정보조회 **이용기관**(공공·교육·금융 등) **확대**(438개→455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충북개발공사,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 이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정보조회서비스(원스크린) 확대(430개→450개)
- 실시간 및 사실여부서비스 등 정보유통 기관 확대(290개→310개)
 - * 사업자 현황정보, 건강보험가입자 명부 등 15종 확대
- 암호체계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빅데이터 공동활용 발전방안 수립 선행용역 및 모델 검증 추진

- 정책 환경변화를 예측·사전 대응하는 지원기반 모델 수립
 - * 행정·공공기관(민간의 가치있는 데이터 포함)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연계·공유 후 분석하여 정확한 수요나 미래변화 등을 예측
- 빅데이터 공동활용 모델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증(2종)
 - * (재난안전) 서울지역 도시내수 침수전조감지
 - * (사회복지) 긴급복지 수요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공동활용지원기반 구축

○ 세종시 이전대비 행정효율화 방안 수립 및 시행

- 기존 3개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 ↔ 세종청사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장 수요 최소화
 - * 세종 청사 내 영상국무회의시스템 신규 구축
 - * 세종 청사 내 부처 공용 영상회의시스템 신규 구축
- 18개 시범과제*를 선정하여,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시범운영
 - * 상훈협의, 직제 및 소요정원,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국가기반시설 관리 등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 환경, 위생 등 25개 자치단체 인허가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조회·분석 등 활용 기능 적용 및 확산

4. 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제공

□ 추진 필요성

- 그간의 정보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정보 유통 미흡으로 국정과 국민간 소통채널 부족
 - 국민의 정책 제기 등에 대한 환류기능이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의 온라인 제공 부족
- 국민과 기업의 참여·소통을 기반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및 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할 필요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정부가 지정한 방식 서비스	개인이 원하는 방식 서비스
제한적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기업활동 주기별 통합서비스
부분적 개인 맞춤서비스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서비스
소통 및 협업 채널 존재	개인중심 소통, 협업, 환류 서비스

□ 중점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소통 채널 확대	1) 소셜미디어 기반 참여·소통 채널 확대 2) 국가 정책 및 예산 집행 상황 실시간 공개 확대
②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 2)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③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1) 기업활동지원 단일창구서비스 확대 2) 글로벌 물류·무역망 연계 확대

①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소통 채널 확대

□ 추진 현황

- SNS를 활용한 쌍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 확대
 -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 제공
 - 4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온라인 대변인제」 운영
-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
 - 국민의 소리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에 환류·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민원채널 연계
 -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79개 교육청 및 지원청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시범 실시
 - (국민)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 불편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현장사진 및 위치정보 전송 가능)
 - (공무원) 현장사진 및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

□ 2012년 추진과제

- 모바일 국가대표포털(m.korea.go.kr, 앱) 서비스 고도화
 - 실시간정보 제공, 국민의견 제안·수렴 등을 위한 모바일 기반 양방향 소통 서비스 제공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 '11년 시범서비스 전국 확대
 -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안전 도우미, 공공기관 안내 등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 과거 민원통계 데이터, 최근 민원발생 정보 및 다출처 민원 관련 분석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민원 예측·예보
 - * 예측·예보정보 표출을 위한 종합 민원상황판 개발
 - 민원정보 분석대상을 시·군·구의 민원관련 게시판, 예산낭비 신고센터, 정책토론(전자공청회) 게시판 등으로 확대
 - * 민원분석결과 제공에 따른 정책환류체계 관리기능 개발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서비스 대상기관을 현재 4개 기관(복지부,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
 - * 국가보훈처,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 **국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식품·환경·교육 등) 사전공개 확대
 - * 사전공개대상 선정시, 국민 모니터단·시민단체 등 참여 강화
- **국가정보화 현황과 계획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종합관리 상황판(IT-Dashboard) 구축 추진**
 -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 관련 정보(예산, 사업내용, 추진단계, 추진 성과 등)를 공개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투명성 확보
 - * itdashboard.gov : 미연방정부의 IT예산, 사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포털시스템
 - 27개 연방기관, \$78.7B, 762개 프로젝트 자료 제공 중
 - 평가결과, 예산집행, 추진일정 등을 신호등 체계로 표시(정상/주의요구/경고)
-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 기능 강화**
 - 공공요금(전철·상하수도 등)을 미리 계산해보는 자가진단 기능 구현

②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추진 현황

- 민원24를 통해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22종 제공
 - 출생·취업·이사·사망 등 국민의 생애 주기별 주요 민원을 해당기관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결
- 국가대표포털 단계적 구축 완료 및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수집 확대·제공, 검색·개인화기능 강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기능 개선
 - 서비스 추천·구독, 디렉토리, 양방향소통 등 모바일 고도화
- 다부처 정보연계를 통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 추가(8종→11종)
-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민원서류 확대(43종→54종) 및 수수료 감면 추진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발급 편의 제고

□ 2012년 추진과제

①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

- 공인중개사, 아·미용사 등 국가자격증 온라인발급 서비스 구축
 - 전국 시도·시군구에서 관리중인 13종의 국가자격증 우선 추진

- 압류정보 통합 제공 및 과태료 납부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전국 통합형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압류정보 연계, 압류관리체계 표준화 및 등록시스템 개발

②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 민원서류 등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 국민 또는 기업이 민원·고지서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전자문서 통합서비스 포털 구축
 - * 현재 민원24, 홈택스, 위택스 등 개별 조회 → 통합 조회
 -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전자문서의 전달(전자파일 저장) 시범 실시 후 단계별 확대 추진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자 편의 제고
 - 교육 관련 민원서류(학교생활기록부외 4종) 추가 발급
 - 발급수수료 카드 결제 추가 및 시각장애인 전용기기 확산 등
-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
 - 모든 공과금의 '온라인 One-Stop 납부시스템' 구축
 - * 모든 공과금을 은행 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 전화,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 추가 개발

③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 추진 현황

① 기업활동지원 단일창구서비스 구축

- 기업경쟁력지원시스템(G4B) 구축
 - 기업일괄처리서비스 확대, 기업애로통합서비스 3차, 기업행정 부담감축서비스 3차, 기업경쟁력 지원 기능 강화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운영
 - 중소기업(120만개)의 주생산품, 매출액, 연혁 등 정보 제공
- 재택 창업시스템 운영
 - 법인설립 관련 5개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창업자들의 회사설립을 온라인으로 one-stop 지원
- * 대법원, 국세청, 행안부, 금융결제원,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 글로벌 지적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세대 특허넷 구축
 - 메인시스템 및 부가시스템 1차 구축 등

② 글로벌 물류·무역망 연계 구축

- 글로벌 화물추적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출입 신고 요건확인 일괄처리를 위한 국가 물류·무역 정보망 구축
 - * 화물추적 연계정보('09년~'11년 총 14종), 수출입신고요건확인('06년~'11년 31개)
- 통합무역정보시스템 EU 분야 추가 구축
 - FTA 및 인증, 환경규제 등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품목별로 분류하여 제공
 - 통합무역(수출)정보 DB 구축, 사업홍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 2012년 추진과제

① 기업활동지원 단일창구서비스 확대

- 행정·공공영역의 전자공문서 유통을 민간영역까지 확대
 - 정부의 전자문서 유통 모델을 민간까지 확산하여, 범국가적으로 업무효율 향상 및 종이문서 없는 녹색성장 환경 조성
 - 기업에 공문서 전달을 위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확대 구축
- 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단일창구 구현
 - 시험·인증·실적 통합(60개→100개), 기업애로 통합신청(10개→20개), 사업내용 일괄변경 완결서비스 대법원 연계 등

② 글로벌 물류·무역망 연계 확대

- 글로벌 수출입 관련 화물추적 및 수출입업무 지원을 위한 물류 및 통관정보 연계 확대
 - 컨테이너 추적정보 및 수출입 통계정보 등 추가(총 23종)
 - 수출입 신고 요건확인일괄처리 연계기관 확대(총 32개)
- 글로벌 지적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세대 특허넷 구축
 - 특허법조약(PLT), 싱가포르조약(STLT) 및 헤이그협정 가입에 대비하여 출원·접수·심사 시스템 등을 전면 개편
 - * 개방형 출원시스템, 국제디자인시스템, PCT 국제특허시스템 등 구축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구축(미국·인도·아세안)
 - 통합무역정보 DB(무역정보 조사 및 콘텐츠 확보) 구축, 모바일 서비스 신규 개발

5.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추진 필요성

- 그동안 국가정보화에 대한 지속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인프라는 취약
 - 높은 외산제품 의존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기대 이하
 - ※ 전자정부(1위) ↔ 글로벌 SW기업(삼성SDS 56위, 안철수연구소 361위)
- DDos/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 발생, 정보격차 확대 등 신규 IT 환경에서도 정보화 역기능이 지속적 발생
- 중복투자 등 정보자원의 운영효율성이 낮고, 대기업 편향·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등으로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미흡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제한된 보편적 전자정부서비스	전면적 보편적 전자정부서비스
제한적 클라우드 인프라	공공분야 클라우드 환경 확산
유선 기반 정보보안 환경	유무선 통합기반 정보보안 환경
하드웨어 중심 정보화 역량	소프트웨어 중심 정보화 역량
정부주도 ICT 생태계	자발적 참여로 발전하는 ICT생태계

□ 중점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환경 구축	1)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의무화
	2)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역기능 대응
②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구축
	2) 범정부 EA기반 국가정보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
③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및 정보화역량 강화	1) 전자정부 해외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2) 스마트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효율화
④공공분야에 건전/공정한 ICT생태계 조성	1)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선진화
	2)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⑤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 스마트폰 등 신규 IT 환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2)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3)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규제 강화

①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환경 구축

□ 추진 현황

①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의무화

- 전자정부 서비스의 웹호환성 수준 진단 및 개선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제정하여 정부기관의 국제 웹표준 준수 및 3종 이상 웹브라우저 지원 의무화
 - * 중앙행정기관 수준 : (‘09)60.1점 → (‘10)83.9점 → (‘11)93.8점 으로 개선
 - * 기초자치단체 수준 : ‘11년 67.6점 , 공공기관 : ‘11년 58.8점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마련
 -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 (‘05)72.2점 → (‘06)81.8점 → (‘07)79.8점 → (‘08)81.0점 → (‘09)86.6점 → (‘10) 86.9점
 -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제정

②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율적 대응

- 8개 관계 부처 정책협의회 운영(3회)을 통한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재개소 및 지역거점 신규구축(2개소 용인 의정부)
-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인터넷 중독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
 - 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위한 ‘바른 어린이 네티즌’ 양성(2만명)

□ 2012년 추진과제

①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의무화

- 전자정부 서비스의 웹호환성 제고를 위한 지침 현행화 및 진단 강화
 - 모바일 웹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호환성 지침 현행화
 - 기관별 모의진단 실시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

- 모바일·그린IT·클라우드 등을 반영한 전자정부 표준 마련
 - HTML5 등 모바일에서 많이 쓰이는 신기술을 반영한 웹사이트 호환성 지침 개정 및 준수현황 진단 실시
 - 그린IT 및 클라우드 기술을 고려하여 PC 규격 등 현행화

②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율적 대응

- ‘정보접근성 서포터즈’를 통한 공공기관 웹 접근성 제고
 -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로 대학생·미취업자 100여명을 선발, 전문교육을 통해 ‘정보접근성 서포터즈’로 양성
 - 장애인 이용도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진단 컨설팅
 - * 컨설팅 내용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여부 진단 및 개선안 제시
- 공공기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중앙·지자체, 공사,공단 등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600개)
-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40만명) 및 상담(24만건) 실시
 - *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확대(‘11년 1,000명 → ‘12년 1,330명)
- 범국민 정보문화 실천운동 전개
 - (가칭)‘스마트 정보문화 실천연합’ 발족, 악성댓글 및 사이버 범죄 예방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 * 6월 정보문화의 달에 권역별 캠페인 집중 실시
- ‘모바일 기기 중독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 * 자치단체,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초·중·고등학교 등에 보급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 인력 양성 확대(‘11년 2,000명 → ‘12년 2,500명)

②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 추진 현황

-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IT 거버넌스 계획’ 수립(‘11.6월)

과 제 명	주 요 내 용
① 클라우드 기반 자원 통합	통합전산센터를 「범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로 육성, 공공 IT자원 중 30%를 클라우드로 전환
② 범정부 공통 플랫폼 구현	모든 기관이 정보시스템 개발시 표준화 된 클라우드 환경을 우선 활용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상호운용성 향상
③ 스마트오피스 업무 환경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모바일 오피스 구현 등을 통해 30% 이상의 공무원이 스마트워크 가능한 환경 조성
④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클라우드를 적용하여 사용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무중단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서비스 발굴 추진 등
⑤ 클라우드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정보 보호·보안 강화방안 수립,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 범정부 정보화계획의 사전 협의·조정 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 및 정보화 사업간 연계성 제고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등

□ 2012년 추진과제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구축

- 범정부 클라우드 자원 풀을 구축하여 업무전환 및 공동활용 추진
 - 범용서버(x86) 및 공개SW 기반의 실시간 자원할당·회수 추진
 - 신규,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부터 단계적으로 업무전환
- * (‘12년) 30개→(‘13년) 60개→(‘14년) 140개→(‘15년) 160개→(‘16년) 200개
- 개인 PC에 저장하던 업무자료를 중앙 서버에 저장·관리하여 정보유출을 방지,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

- '12년 범정부 클라우드 사무환경 구축계획 수립, '13년부터 전환 추진

* 행안부 및 '12년 세종시 입주기관 '13년 전환, '15년까지 중앙부처 단계적 전환

○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실행전략 및 로드맵 마련

- 세종시 1단계 이전기관에 대하여 통합전산센터 세부 이전계획 수립

* 6개 중앙행정기관 및 6개 소속기관 서버 900여대 실사 및 단계적 이전 추진

- 제3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대상기관이 보유한 하드웨어 사양, 랙 규모 등 전산자원 내역 조사

○ 클라우드 기반의 시군구 행정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 주민, 토지 등 국가 기초 정보를 관리하는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연속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체계(DRS) 구축 추진

○ 지역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지원

-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 표준모델 수립

* 시도별 1개소 형태, 시도 및 소관 시군구의 본청 및 사업소 대상

② **범정부 EA기반 국가정보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운영효율화 가이드라인 마련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기준(항목·지표·방법 등) 확정

- 정보시스템 일몰제 등 정보자원 폐기기준 마련 및 제도화

○ 정보자원 유지보수등급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H/W, S/W 유지보수 등급제 적용기준 및 효율, 유지보수 적정인력 산정모델 확정

* 유지보수 효율화 방안 적용을 위해 '13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개정(기재부 협의)

○ SOC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內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마련

- 정보화계획 수립 기준, 중복성 검토 및 협의조정 절차, 국가 정보화시행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③ 전자정부 해외 진출 확대 및 정보화역량 강화

□ 추진 현황

① 전자정부 해외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 전자정부 수출 2억 3,566만불 달성('10년 1억 4,876만불)
 - 수출 2억불 달성전략 수립(2.17), IT기업간담회(3.4, 9.6), 수출 지원협의회 개최(6.28, 12.16) 등 민관 협력 추진
- 외국 장차관 초청연수 등 정보화 네트워크 강화로 수출 지원
 - 도미니카 등 4개국 초청연수(3월), 인도네시아 디지털개발포럼(5월) 등
- 정보화 MOU 체결, IT 협력위원회 개최 등 양자간 협력 강화
 - 한-파나마(4월), 한-이탈리아 MOU(9월), 한-브루나이 협력위(10월) 등

② 스마트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효율화

- '11년 정보화 인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인력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보화 역량개발 프로그램 품질 제고, 스마트러닝 교육 활성화 등
-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 실시(226개 기관 26,015명)

□ 2012년 추진과제

① 전자정부 해외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수출 지원
 - 필리핀, 아르헨티나, UAE 등과 MOU 추진(12개국→17개국)
 - 장·차관 등 고위급 해외 마케팅 강화
 - 브루나이, 베트남, 불가리아, 모로코 등과 IT협력위원회 운영

○ 전자정부 10대 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 통합전산센터, 관세, 조달, 특허, 우편물류, 국세, 재정, 재난 관리, 출입국관리시스템,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상품화
- 전자정부 추진개요, 성공사례, 국제공헌 등으로 구성된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해외공관, 외국정부, 수출기업 등에 배포
- * 국문, 영문, 스페인어로 우선 제작하고 향후 아랍어 등으로 확대

○ 전략국가 대상 정보화 ODA 집중 지원

- (정보접근센터) '11년까지 총 30개 → '12년 4개 추가 구축
- (IT봉사단) '11년 4주(612명) → '12년 4주(400명), 8주 이상(150명)
- (초청연수) 외국 장·차관 프로그램 확대('11년 8명 → '12년 12명)

○ 대기업-중소기업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 민·관합동 전자정부 수출지원협의회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권장, 개척단 파견시 중소기업 일정비율 참여
- 정보화 ODA 사업 시 중소기업 참여·연계 강화

② 스마트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효율화

○ 정보화 인력현황 실태점검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각급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 인력구성 현황 실태점검·분석
- * 정보화 조직·인력 현황 및 비율, 직급구성, 재직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담당인력 교육, 전보기준 등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 내실있는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 실시

- 진단대상 확대('11년 3만명→'12년 4만명) 및 기관별 상시 역량진단 기능 개발
- ※ 개도국 정보화 컨설팅 수단으로 정보화 역량진단 모델 활용, 수출 연계

4 공공분야에 건전하고 공정한 ICT 생태계 환경 조성

□ 추진 현황

①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선진화

-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과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수립(2월, 행안부·지경부 공동)
- 하도급 관행 개선,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등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9.5)
 - * 하도급 비율 제안서 명시, 과업내용 명확화, 공고기간 현실화 등 11개 과제

②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공공정보화 시장이 국내 SW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現 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VIP보고 '11.10.27)
 - * '12년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규모 확대, '13년부터 신규참여 전면 제한

□ 2012년 추진과제

①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선진화

- 공공정보화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수발주 관행 및 제도 개선
 -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하여 하도급 노임 하한 설정
 - * 노임하한(안) : SW기술자 기준단가 + 제경비 10% + 기술비 10%
 - 중소 하도급자에게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 기술분야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제도 도입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은 상대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시 기술중심의 평가 확대(기술비중 80%→90%)
 - * 기술 對 가격의 평가비중 ('11) 8:2 → ('12) 9:1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전문가 Pool 구축, 발주기관 전문가 추천

* 자체발주 사업 우선 적용, 조달발주 사업은 조달청과 협의하여 적용

- 행정·공공기관 정보화사업에 중소기업 직접참여 확대

* 대기업과의 공동참여시 중소기업 지분율 : ('11) 35% → ('12) 50%

○ 제도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 대규모 신규개발·다부처 연계 사업 등 전문화·체계화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PMO) 활용 제도화

* PMO 사업대가 기준 제정, PMO 도입·운영 지침 제정

- 사업품질 및 일정의 적정성, 기술자문 등을 감리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주감리제도 도입

- 기관별 수발주제도 전문 담당관 지정 및 수발주제도 교육
확대·강화, 제도 준수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②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우수한 중소 SW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지원

- 자체개발 타당성 평가 시행 등 상용SW 우선사용 의무화
및 상용SW 구매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상용SW 우대
- 기업이 개발한 SW의 무단활용 금지 등 SW지식재산권 보장
- 개발방법 및 산출물 작성방법 등 중소기업 개발자 교육

○ 공공SW 표준 개발 환경으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제공

* 표준프레임워크 : 모바일 등 신기술 기반 개발도구 및 공통기능(229종) 무상제공

⑤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추진 현황

① 스마트폰 등 신규 IT환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 전자정부 정보보호 중기 추진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공무원 PC 보호, 정보보호 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 등
- 정보보호 인력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60명 증원(중앙부처 45명, 시·도 15명)
 - 전산직 공무원 5·7·9급 시험과목에 정보보호 관련 과목 신설
 -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11.11월) → 유예기간(2년) → '14년 시험과목 개정 시행
- 제어시스템 보안대책 마련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
 - 기반시설 외부용역 직원의 보안실태 파악 및 보호대책 마련('11.4월)
 - 교통·정수 등 39개 제어시설 신규지정 권고 및 지정 확대(153→186개)

②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규제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11.3.29.)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법 시행('11.9.30.)
 - 법 제정 후 6개월만의 시행으로 사업자 등 법 수범자의 준비 부족 등을 고려, 6개월간('11.9.30.~'12.3.29)의 계도기간 운영
 - * 제도시행 준비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권고, 시정조치 중심으로 운영
- 각 부처 관련 법령 정비 등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220개 대통령령을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맞추어 일괄 개정('11.12월)
- 중소기업자 기술지원, 사업장 현지실태 점검 및 컨설팅 등 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 * 중소기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10월) 운영, 법령·지침 해설서 발간(12월), 공공기관, 사업자 업무매뉴얼 배포(12월말) 등

□ 2012년 추진과제

① 스마트폰 등 신규 IT환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 SW개발보안(Secure Coding) 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 정보화 사업 발주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대상 우선 실시
 - * ('13년) 20억원 이상 → ('14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 전자정부 영역별 보안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 매뉴얼에 따라 연 2회 각 기관 정보보호 실태진단 및 개선지원
- 국내·외 신종 공격기법, 취약점 등에 대한 DB 구축·관리
 - 해킹·취약점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전 행정기관 공유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 보안 Test-Bed 구축
 - 제어시스템 SW의 보안취약점 연구, 악성코드 테스트 환경 마련
- 소속기관 및 시·군·구 등 취약기관 보안관제 강화
 - 소속기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 보안관제 실시
 - * 보안관제센터가 없는 중앙부처(행안부, 감사원, 보훈처, 소방청)의 소속기관 대상
 - 시군구는 보안관제 범위 확대(보안장비 → 보안장비 및 서버)
- DDoS 대응시스템 소속기관까지 확대 구축
 - 현재 중앙부처 본부 → 경찰병원, 출입국관리소 등 320개 소속기관
- 주요 민원서비스에 2채널 인증체계 도입으로 본인확인 수단 강화
 - * 2채널 인증 : 2개 통신경로(PC, 핸드폰)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확인

②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 정부전산백업센터 기본설계 및 부지 관리전환 추진
 - 공사 발주방식(턴키방식) 확정 및 기본설계 실시
 - 건립 부지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및 관리전환 추진

③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집중 교육·홍보

- 경제단체, 사업자협회, 개인정보 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교육
 - * 상공회의소, 학원연합회 등과 업종별·지역별 순회교육 실시
- 언론사·포털사이트와 함께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및 홍보 추진
 - * TV공익광고, 전문가 기고, 개인정보보호 퀴즈대회 등 이벤트 시행 등
- SNS 홍보단을 구성하여 트위터 등을 활용한 정책 홍보

○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체계적 관리 지원

-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 강화
 - * 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 전담인력 배치(9명), 신속 지원체계 구축(3월)
-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집중 실시(1~3월)
 - * 자동차수리업, 숙박업 등 10개 취약업종 대상 150회 실시
- **소** 중소기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가진단 프로그램 제공
 - * 웹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백신·암호화솔루션 지원(2,000개) 병행
-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확대('11년 5만개 사이트 → '12년 10만개)

○ 개인정보 처리역량 강화 및 피해구제 강화

- 개인정보 정부합동점검단 상시운영(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전문인력 양성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6월) → 시험 시행(하반기)
-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 사업자 및 기관에 대해 인증마크 부여
 - * 인증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마련(5월), 시범적용(10월)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60일→40일)
 - * 분쟁조정위 분야별 조정부 회의 개최 확대('11년 6회 → '12년 24회)

IV

과제별 주관기관

아젠다	세부 과제	주관기관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② 범부처 모바일 공통기반·인프라 확충	행정안전부
	③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④ 실시간 지능형 공공안전망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⑤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⑥ 수요자 중심의 국가복지시스템 선진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일과 삶이 조화된 스마트워크 활성화	⑦ IT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확산	행정안전부
	⑧ 조직·인사·복무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⑨ 지식기반 기관간 디지털 행정협업 구축	행정안전부
소통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⑩ 투명하고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소통 채널 확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⑪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⑫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특허청 지식경제부, 관세청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⑬ 보편적 전자정부서비스 환경 구축	행정안전부
	⑭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행정안전부
	⑮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및 정보화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⑯ 공공분야에 건전/공정한 ICT생태계 조성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⑰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정안전부

V

과제별 소요예산

아젠다	세부 과제	소요예산(억원)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278.74
	② 범부처 모바일 공통기반·인프라 확충	53
	③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225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④ 실시간 지능형 공공안전망 서비스 제공	664.8
	⑤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50
	⑥ 수요자 중심의 국가복지시스템 선진화	289.78
일과 삶이 조화된 스마트워크 활성화	⑦ IT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확산	31.5
	⑧ 조직·인사·복무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54
	⑨ 지식기반 기관간 디지털 행정협업 구축	252
소통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⑩ 투명하고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소통 채널 확대	42.5
	⑪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98
	⑫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182.2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⑬ 보편적 전자정부서비스 환경 구축	33.8
	⑭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362.4
	⑮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및 정보화 역량 강화	46.7
	⑯ 공공분야에 건전/공정한 ICT생태계 조성	4
	⑰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97
합 계		2,965.42

1 추진 배경

- UN 전자정부 평가 1위('10)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청사진 필요
-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략으로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수립

2 스마트 전자정부(Smart-Gov)의 개념

- 진화된 IT기술과 정부서비스간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부를 의미

【스마트 전자정부가 구현된 모습】

- ◆ Seamless : 부처별 서비스 연계·통합, 국민 중심의 통합·맞춤형 서비스
- ◆ Mobile : 모바일 전자정부,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
- ◆ Any time :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 ◆ Real time : 국민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 대응체계
- ◆ Together : 기업 상생, 소외계층 배려, 국민 참여·소통으로 서비스 선진화

3 스마트 전자정부 비전 및 목표

- (비전)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 (목표) UN 평가 1위 지속 유지, 세계 최고수준 만족도 실현
- (전략) 공개(Open), 통합(Integration), 협업(Collaboration), 녹색정보화(Green)

4 추진 전략

① (공개 : Open) 공공 정보·서비스 공개 및 개방

- 민간 분야에서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 및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
-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서비스를 투명하게 공개

② (통합 : Integration) 수요자중심 서비스 통합 및 다채널 통합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서비스와 데이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
-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채널간 상호 호환 및 연계·통합 추진

③ (협업 : Collaboration) 조직, 부서간 협업 및 정보 공유

- 국민 중심의 선제 행정, 맞춤형 행정, 현장 행정, 융합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간 협업 및 공유 시스템 구축
 - ※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까지 협업 및 공유 범위 확대
-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조직·부서간 협업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문화 및 제도의 정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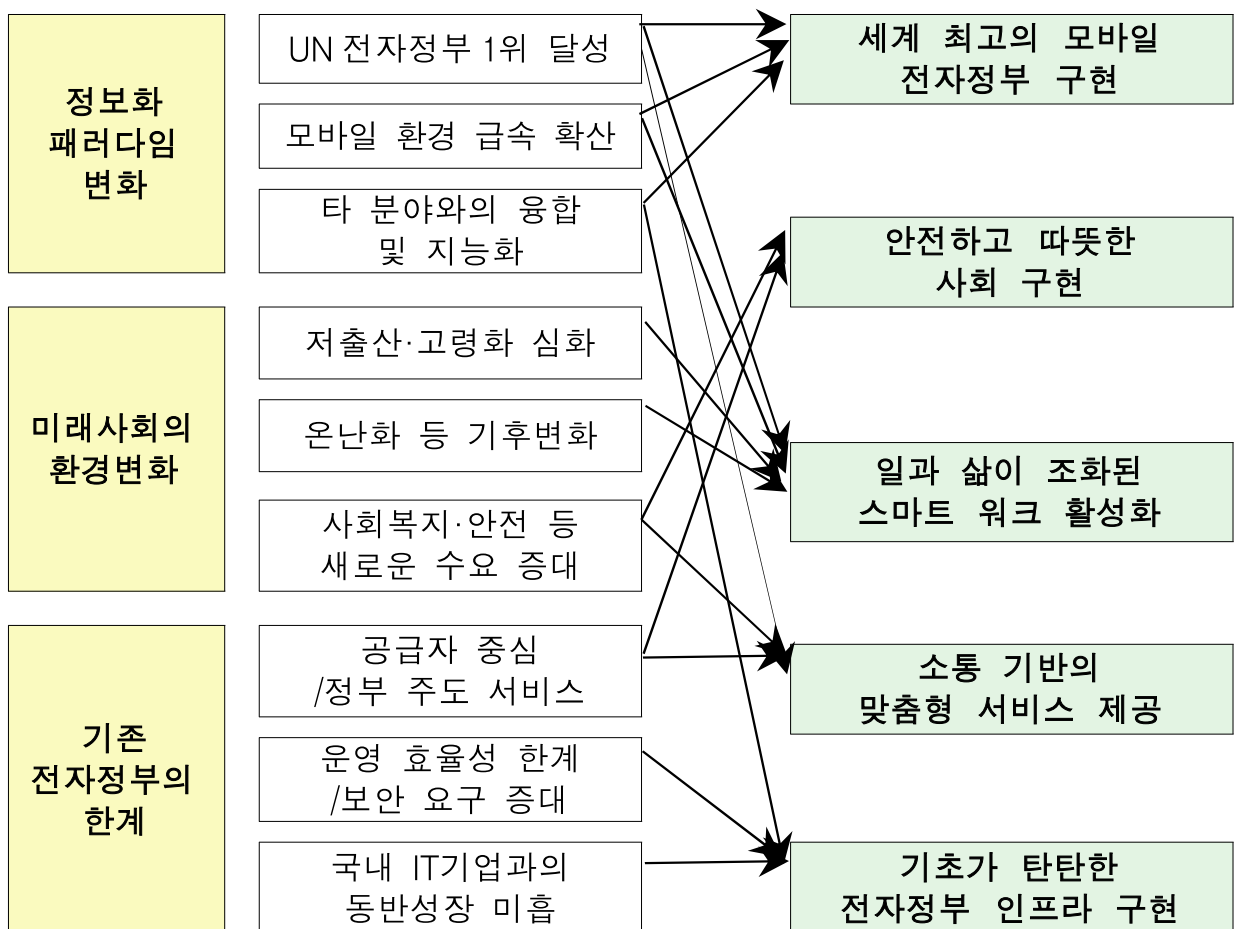
④ (녹색정보화 : Green) 친환경적 및 저비용 시스템 구축

- (Green of IT) 그린 IT제품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IT시스템의 그린화
- (Green by IT) 스마트 IT를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5 추진방향 및 5대 아젠다

- ① (선도) IT 신기술을 활용,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 모바일 전자정부 조기 구현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 선도
 - IT 기술과 서비스간 융·복합으로 글로벌 전자정부의 위상 공고화
- ② (고도화)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서비스의 수준 제고
 -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
 - 재난·안전·복지 등 새로운 국민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
- ③ (인프라 강화) 기초가 탄탄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보편적 전자정부 이용 환경 구축
 - 국가정보자원의 운영 효율화 및 전자정부 추진 역량 강화

<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의 5대 아젠다 >



①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모바일 전자정부 포털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대표 서비스의 모바일화 추진**
 - ※ 웹1.0 시대의 시행착오(개별 구축→통합)를 개선, 초기부터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기획·설계 후 서비스 구축
- **모바일 기기의 특성(이동성·위치기반 등)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발굴**
 - ※ 위치정보와 카메라 기능이 결합된 생활민원(도로파손 등) 신고서비스
- **이동 중 메일, 메모보고 등이 가능한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지원**
 -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옥외광고물 조사업무 등 현장업무 병행 지원
-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창출 지원 강화**
 - ※ 기상·교통·관광 등 상업적 활용도 높은 100대 공유서비스 선별·제공(∼'13년)

②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범죄예방, 치안 등 실시간 지능형 공공안전망 구축**
 - ※ SOS 국민안심서비스, CCTV 통합관리, 범죄지도 구축 등
-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 ※ 상습침수, 산사태 구역에 센서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상황전파
- **먹을거리 안전체계 확립 등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 ※ 식의약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IT 기반 복지서비스 선진화**
 - ※ 복지자격검증체계 구축, 온라인 나눔포탈,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등

③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오피스 등 IT 기반의 근무환경 조성**
 - ※ 스마트워크센터 : '10년 시범구축(2개) → '15년 500개(공공 50개, 민간 450개)

- 원격영상회의 및 통합커뮤니케이션 등 디지털 융합행정체계 구축
 - ※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비효율 극복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 스마트워크 참여목표 : ('10년) 4.7% → ('12년) 10.6% → ('15년) 30%

④ 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정부 정책·정보 공개 확대 및 국민의 참여·소통 채널 확대
 - ※ 정부의 정책·예산 집행상황 등 공개 확대, 트위터 등 SNS 도입·연계 강화
- 국민·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통합 가속화
 - ※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미환급금 찾아주기, 생활정보 통합 알리미 등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
 - ※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⑤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 ※ 웹표준 준수 의무화,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등
- 범정부 EA,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 ※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통합전산센터 내 HW, SW자원의 공동활용 등
-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 DDos 대피소 설치, PC해킹 차단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대상 확대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한 정보화사업 발주제도 개선
 - ※ 저가수주 방지,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통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및 전자정부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 조달·관세·정부통합센터모델 등 전략 상품화 및 MOU 등 협력체계 강화